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20-30대는 복지 불만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복지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조사

: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20-30대는 복지 불만

Executive Summary	i
1. 고령화와 복지 재정 우려	1
2.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결과	2
3. 시사점	12
【HRI 경제 통계】	14

고령화와 복지 재정 우려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청년실업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함
-	따라서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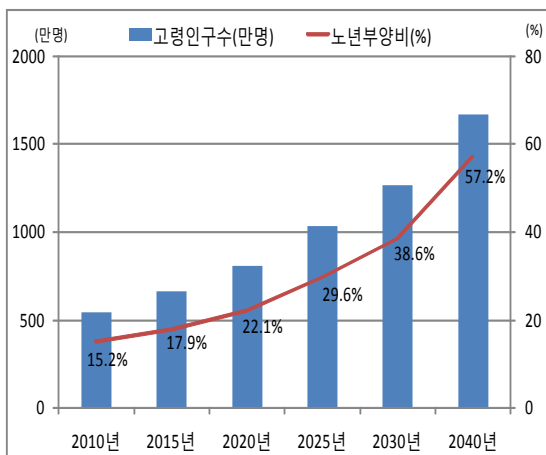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구분	특징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아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반수 이상(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 · 다만, 국가 재정은 복지(41.0%)보다는 성장(59.0%)에 우선 지출 - 국민의 60.8%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혜택을 늘리는 형태 선호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차 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과 복지) 2-30대는 복지 우선, 50대 이상은 성장 우선 · 20대(51.6%)와 30대(55.0%)는 복지, 50대 이상은 72.6%가 성장 우선 - (선호 복지형태) 선택적 복지를 50대 이상이 20대보다 훨씬 많이 선호 · 선택적 복지 선호도는 50대 이상은 74.8%인 반면, 20대는 58.9% - (현재 복지수준) 50대 이상은 복지 만족 많고, 20대는 복지 불만 많은 편 · 복지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은 57.8%가, 20대는 34.1%만 잘 갖추어졌다고 인식 - (미래 복지수준) 젊은 세대는 향후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더 많이 걱정 · 30대는 과반수 이상(53.8%)이, 50대 이상은 33.7%만이 복지혜택 감소 걱정
세대 갈등 통합가능성 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 경제 성장 공로 때문에 복지 혜택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 이상(63.8%)보다 20대(70.6%), 30대(74.9%), 40대(72.7%)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우선 배려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준비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22.5%) ·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인상(19.5%)이나 수급액인하(31.3%)보다 수급 개시 연령 연기(49.2%)를 가장 선호 - 다만,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보장 필요 · 20대(61.7%), 30대(65.3%)는 많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 - 3대 연금(군인, 공무원 등)은 세금보전(17.2%)보다는 자체 해결 방안(82.8%)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시사점
① 향후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
② 세대 간 복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 전달을 통해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기회로 활용
③ 국민연금은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고령화와 복지 재정 우려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재정, 특히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문제가 청년실업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함
 -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인해 2035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청년층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얼마 전 인터넷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이슈화되었던 것처럼 복지와 관련하여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언제든지 또다시 부상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와 연계되어 청년층의 복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인식에 대한 세대 간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고령인구수와 노년부양비 전망>



자료 : 통계청
 주1 : 고령인구=65세이상인구
 주2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단위:조원)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
2013	417.7	52.2	14.6	37.6
2015	514.1	69.6	18.4	51.2
2020	847.2	109.1	33.9	75.2
2030	1732.4	186.9	90.0	96.9
2040	2494.5	258.4	213.8	44.6
2044	2558.7	283.7	286.5	-2.8

자료: 보건복지부(20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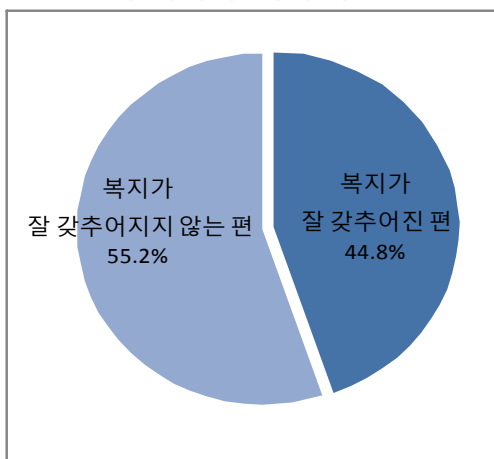
2. 복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결과1)

1) 복지 수준 및 선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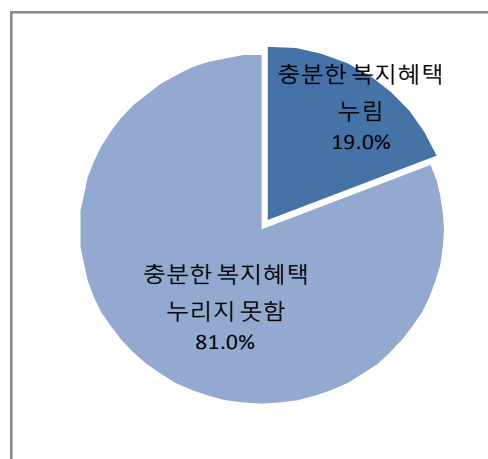
○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복지 수준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편

-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고려할 경우 아직까지 국가 복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 ‘우리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5.2%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또한, 10명 중 8명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국가로부터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 ‘개인적으로 볼 때 귀하는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1.0%가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우리나라 복지 수준>



<개인의 복지 혜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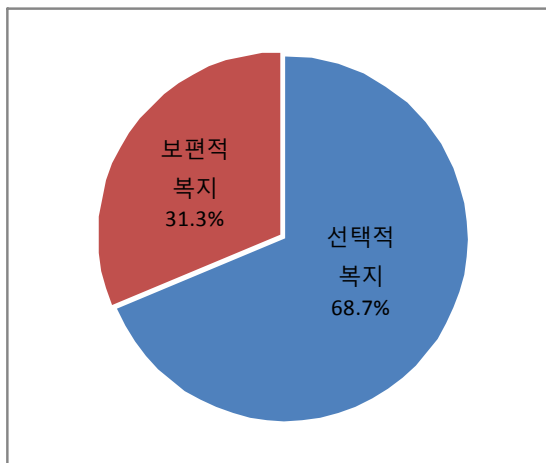
주)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4월 설문조사

- 1)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살펴봤는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주일 간이었고, 전화설문으로 95%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 범위는 ±3.0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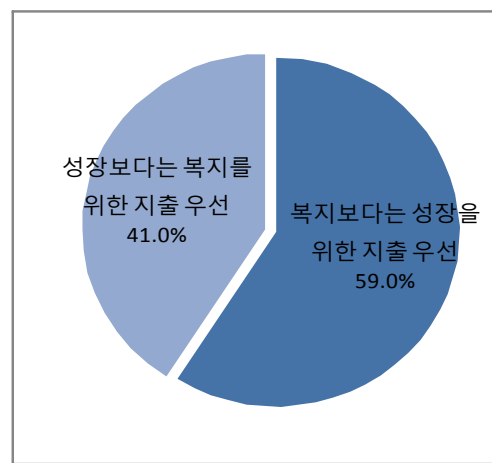
○ 선호 복지 유형은 선택적 복지이며, 복지보다는 성장 우선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31.3%가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모두 골고루 받는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8.7%에 이름
- 또한,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국가 재정을 복지보다는 성장에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9.0%에 이름

<선호 복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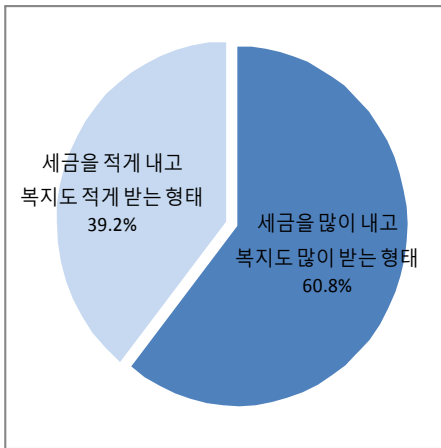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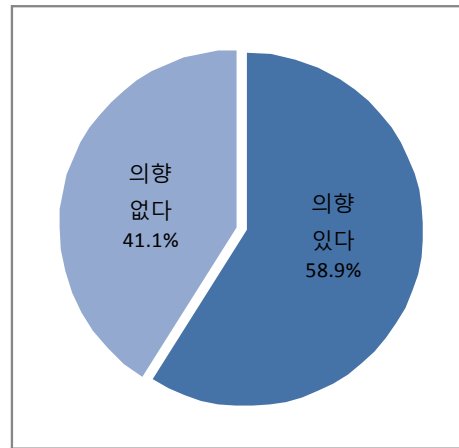
○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 의향 있음

- 국민들 10명 중 6명(60.8%)은 세금 많이 내고 복지도 많이 받는 형태 선호
 - 또한, 과반수 이상(58.9%)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복지 수준 향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판단됨

<복지와 세금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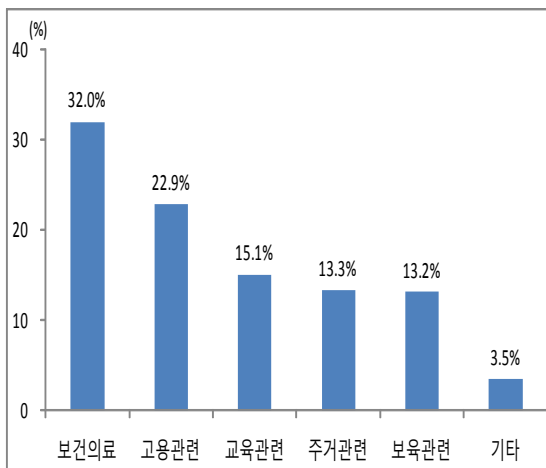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지불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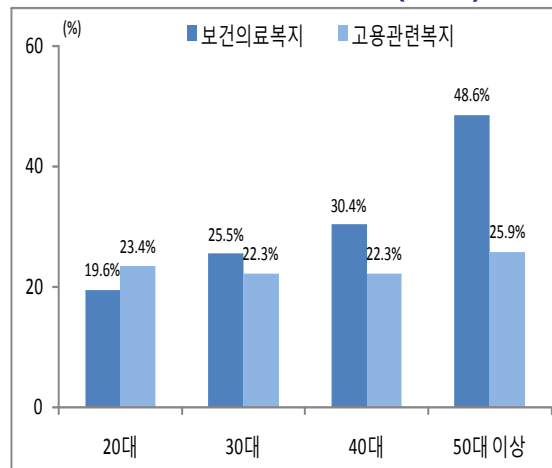
○ (복지 필요 분야)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는 보건의료 복지

-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건의료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함
 - 보건의료복지(32.0%), 고용관련복지(22.9%), 교육관련복지(15.1%), 주거관련 복지(13.3%), 교육관련복지(13.2%) 순서임
 - 50대 이상은 보건의료복지를 가장 많이 필요한 반면, 20대는 고용관련복지를 우선 필요로 하고, 40대의 경우 고용관련 복지보다 교육관련 복지 필요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



<연령별 필요 복지 분야(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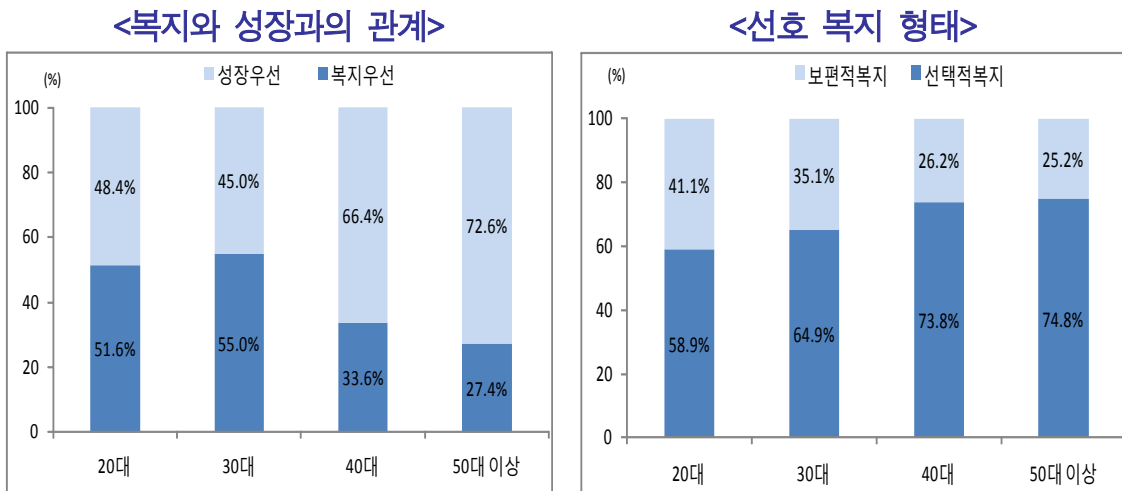


주) 40대 2위는 고용관련이 아닌 교육관련복지

2) 복지 관련 세대 간 인식 차이

○ (선호 복지 유형) 젊은 세대는 노년층과 달리 성장보다는 복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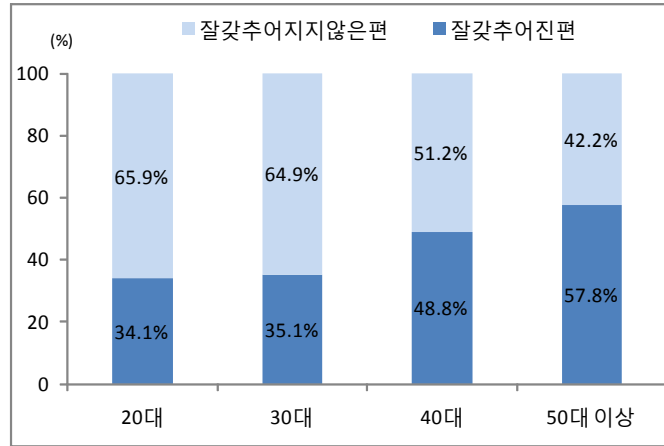
- 선호 복지 형태나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복지 관련 세대 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복지와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51.6%와 55.0%가 성장보다는 복지를 우선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27.4%만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선호하는 복지 형태에 대해서는 20대의 경우 선택적 복지 선호 비율이 58.9%인 반면, 50대 이상은 74.8%로 차이를 나타냄



○ (현재 복지 수준) 젊은 세대는 현 복지 수준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연령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정도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20대(34.1%)와 30대(35.1%)에 비해 50대 이상 57.8%가 우리나라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함
 - 50대 이상은 과거 어려웠던 상황을 상기하면서 현 복지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젊은 세대는 현재 자체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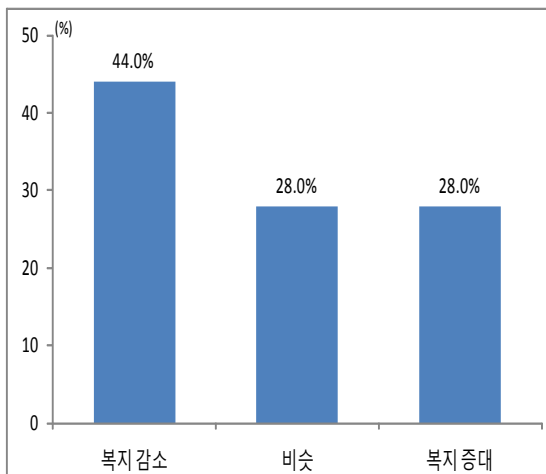
<우리나라 복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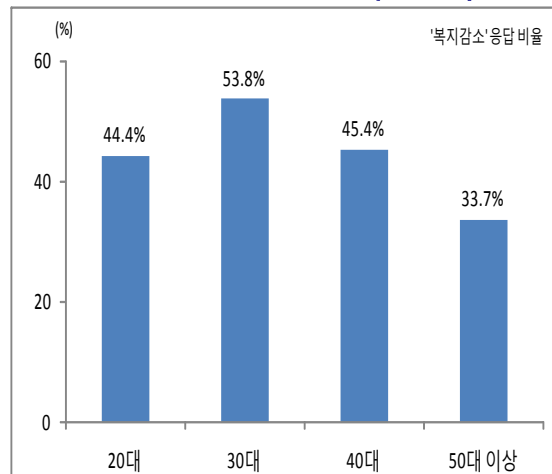
○ (미래 복지 수준) 젊은 세대의 미래에 복지수준에 대한 우려 높은 편

- 젊은 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미래 복지에 대한 우려가 큼을 알 수 있음
-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44.0%,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8.0%, 좀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8.0%로 나타남

<미래 복지 수준 예상>



<미래 복지 수준 예상(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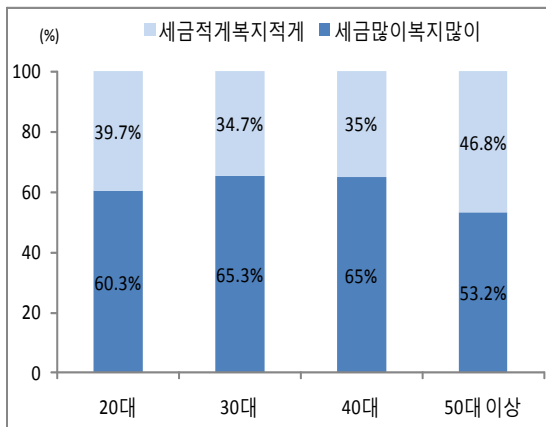
- 특히 30대가 미래 복지 감소를 좀 더 우려하고 있음

- 30대의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 53.8%, 지금과 비슷할 것 25.9%, 좀더 증대될 것 20.3%로 나타남
-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지금보다 복지가 줄어들 것 33.7%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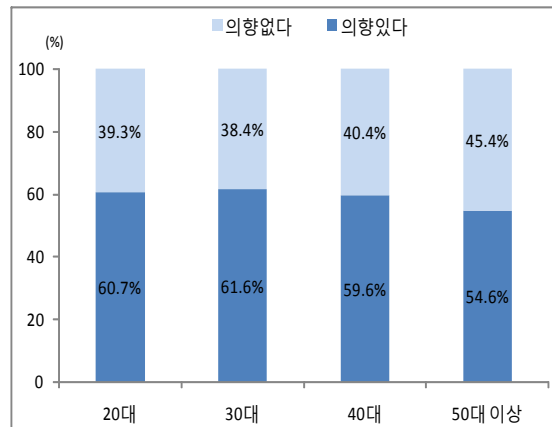
○ (복지와 세금) 젊은 세대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 더 많음

- 젊은 세대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많이 받고 싶어함
 -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응답비율이 50대 이상이 53.2%인 반면, 20대 60.3%, 30대는 65.3%, 40대 65.0%로 높음
 - 추가 세금 지출 의향도 50대 이상이 54.6%인 반면, 20대 60.7%, 30대는 61.6%, 40대 59.6%로 높음

<복지와 세금과의 관계>



<추가 세금 지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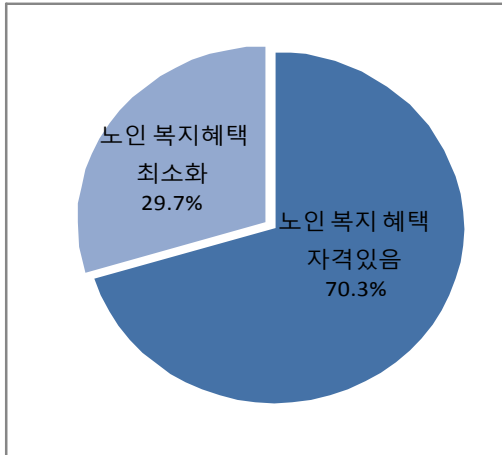
3) 세대간 갈등 봉합 가능성

○ 젊은 세대는 노년층의 복지 혜택 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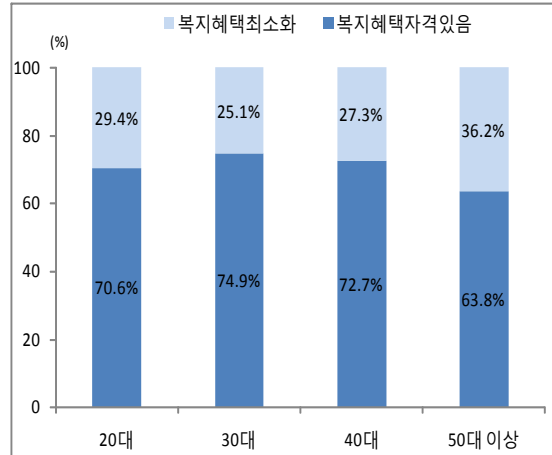
- 많은 국민들이 노년층의 복지 혜택에 대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해 향후 세대간 갈등 우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노인층은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3%임

- 특히, 20대(70.6%), 30대(74.9%), 40대(72.7%)의 경우 노년층 복지를 지지하는 인식이 50대 이상(63.8%)보다 훨씬 큼

<노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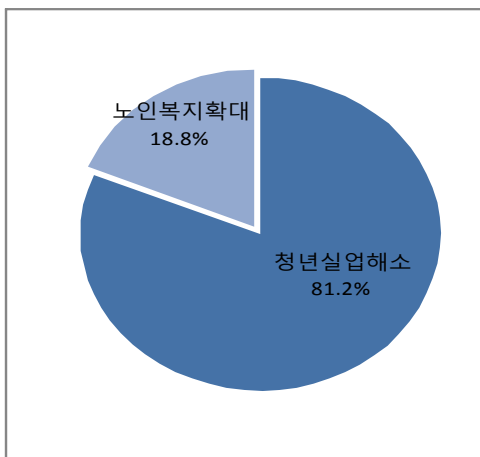
<노년층에 대한 복지 혜택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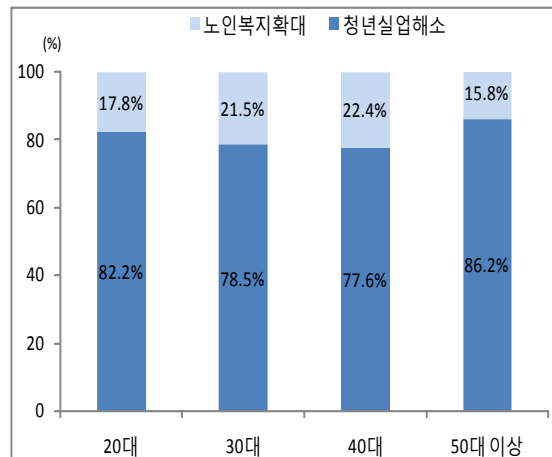
○ 노년층도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우선 배려

- 전체 국민의 81.2%가 청년실업 해소와 노인복지 확대 중 청년실업 해소에 국가 재정을 우선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
- 연령별로 청년실업 해소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50대 이상이 86.2%로 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노인복지와 청년실업 인식 비교>



<청년 실업 해소 우선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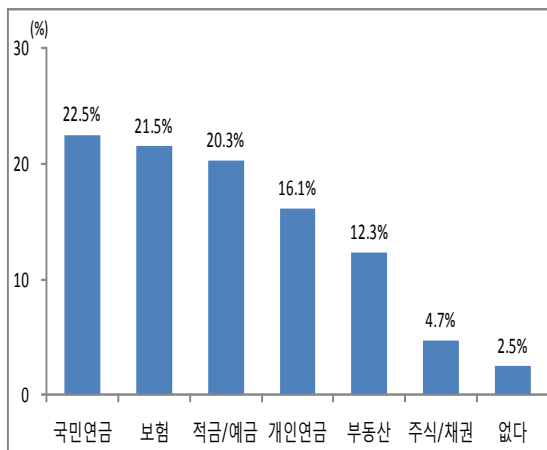


3) 연금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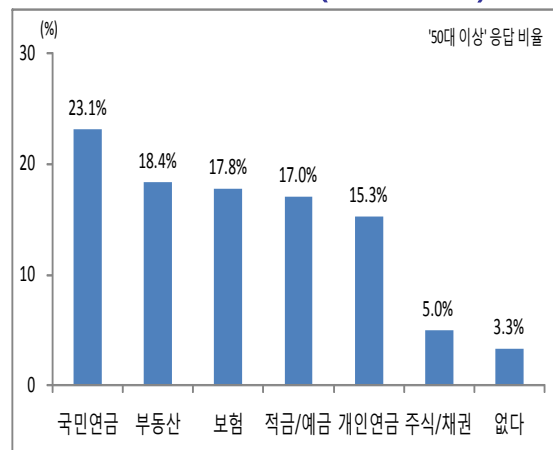
○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1위

-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2.5%), 보험(21.5%), 적금/예금(20.3%), 개인연금(16.1%) 순서임
- 한편, 50대 이상 역시 국민연금이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을 경제적 준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
 - 50대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 23.1%, 부동산 18.4%, 보험 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도 3.3%정도임

<노후의 경제적 안정 대비 방안>



<노후의 대비 방안(5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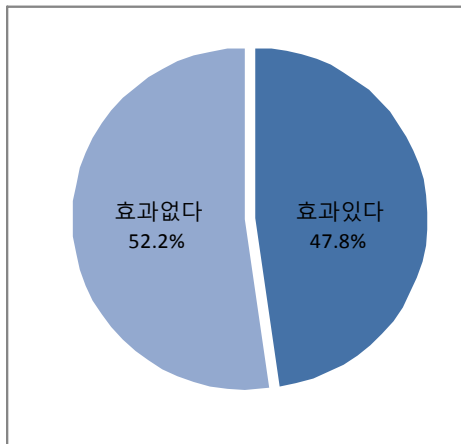


○ 다만,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낮으므로 정부의 확실한 보장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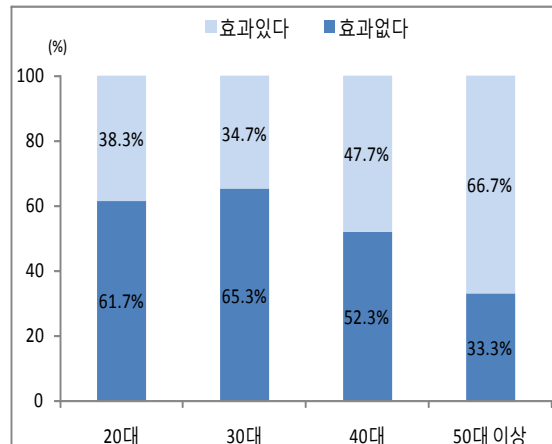
- 재정고갈 등의 우려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우려가 많아짐

-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효과 없다는 사람이 과반 이상임(52.2%)
 - 특히 20대(61.7%), 30대(65.3%)는 많은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나마 40대(52.3%)는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적으로 적음
 - 반면, 50대 이상은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3.3%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노후 준비 효과에 찬성하는 의견이 좀더 높음
- 따라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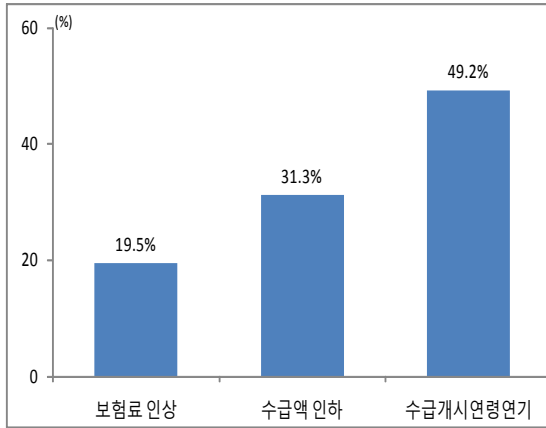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노후 대비 효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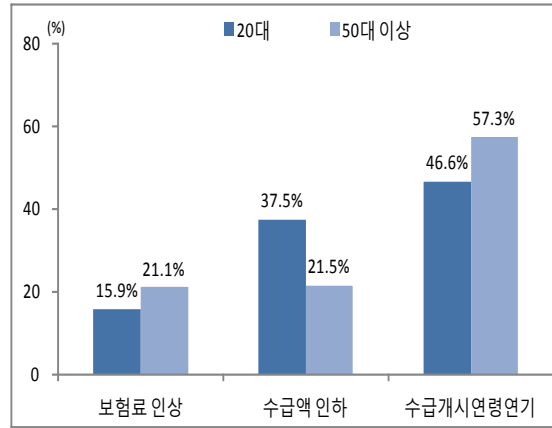
○ 국민연금 해결 방안으로는 수급시기 연기를 가장 선호

-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급연령 시기 연기(49.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외에 수급액인하(31.3%), 보험료 인상(19.5%) 순서임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수급액 인하에 대한 찬성이 많은 편(37.5%)이고, 50대 이상은 수급액 인하(21.5%)보다 수급시기 연기(57.3%)를 더욱 선호하는 편임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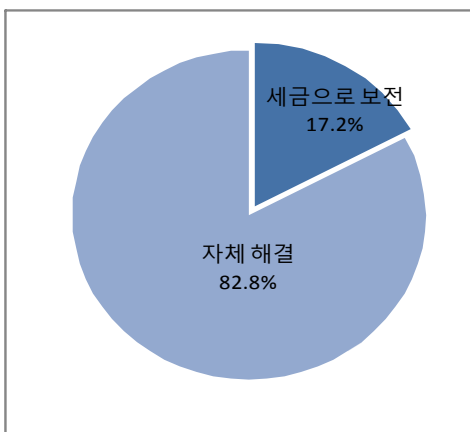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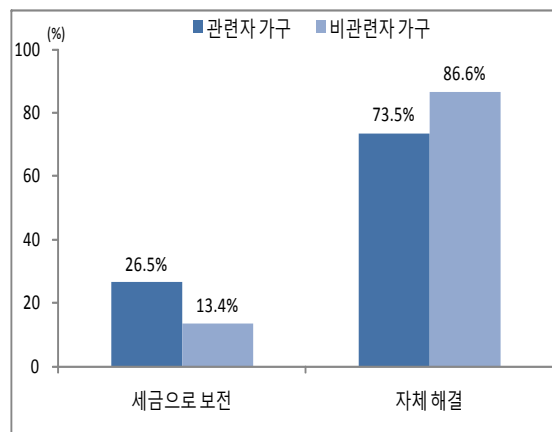
○ 3대 연금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의 적자 보전을 위해 세금투입보다는 자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세금으로 충당해주어도 된다는 의견은 17.2%에 불과한 반면, 수급시기나 연금액 조정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82.8%임
 - 3대 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가구들 역시 적자 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3.5%에 달함

<3대 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3대 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방안>



3. 시사점

- 첫째, 향후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세금과 복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
 -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
 -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5%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에 불과하므로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여지는 충분함
 - 특히,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를 더 많이 받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 둘째, 세대 간 복지 갈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 전달을 통해 인식전환이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세대간 갈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달을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함
 - 국민연금 재정 문제 등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대간 복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갈등에 대한 우려가 실제적 갈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 부분에 대한 갈등이 우려에 불과했다는 사실 전달이 시급함

- 셋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시기 조절을 통해 재정 문제 해결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
 -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가 세대간 복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급시기 조절을 우선 염두에 두고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해야 함 **HRI**

장후석 연구위원 (chahus@hri.co.kr, 02-2072-6234)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3.1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6	2.5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0.7	2.2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5	4.8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28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9	259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5.6)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6.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2.5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6	1,085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